

코로나 이후의 한국 사회? :전 지구적 생명정치로의 전환을 위하여

정 일 준

고려대학

코로나19라는 유령이 세계를 떠돌고 있다. 2020년 3월 11일 WHO는 세계적 대유행(pandemic)을 선언했다. 전 지구적 연결이 지금처럼 촘촘하지 않고 상호 작용이 지금처럼 활발하지 않았다면 국지적 유행(epidemic)으로 끝났을지 모른다. 각국 정부는 코로나 19 감염병 사태를 맞아 국경 폐쇄, 지역 봉쇄, 자가 격리 등 다양한 비상 대책을 실행하고 있다. 가히 전시(戰時)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이다. 그렇지만 엄연히 전쟁과는 다르다. 과장하지 말아야 한다. ‘공중 보건 비상사태’일 뿐이다. 물론 코로나19가 초래한 팬데믹은 세계 경제와 국제 정치에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처음 중국과 한국 등 아시아에서 코로나19가 발생했을 때, 미국을 비롯한 유럽 국가들은 ‘바다 건너 불구경’ 하듯이 수수방관했다. 해당 국가를 ‘미개하다’고 비하했다. 지금 미국은 코로나19 확진자와 사망자 수에서 세계 정상을 달린다. “미국이 선진국 맞나?” 하는 의구심이 전 세계에 확산되었다. 이탈리아, 영국, 프랑스 등 유럽 선진국들도 대동소이하다. 일본도 사정은 좋지 않다. 과거 제국주의자들은 공간을 시간으로 대체했다. 세계 각지를 정복하고 현지인을 복속시켜 착취하면서 그 지역과 원주민을 ‘후진 지역’, ‘미개인’이라고 불렀다. 선진국이라고 뽐내던 과거 제국의 내부에 ‘후진 지역’이 이식되었다. 식민지가 내부화되면서, 시민 중 일부는 ‘호

모 사케르'로 강등 당했다. 코로나19 앞에 만국은 평등하다. 그리고 각국 안에서 각 지방, 각 개인은 불평등하다. 코로나19 사태가 드러낸 경제 불평등과 취약층의 재난 무방비 상태야말로 '선진국', '문명'을 떠들던 국가들의 민낯이다.

'코로나 이후의 한국 사회'를 전망하기 위해서는 먼저 '한국 사회'란 무엇인가를 재고(再考)해야 한다. 둘째, 코로나 '이후'를 전망하기 위해서는 코로나 이전과 대비해야 한다. 셋째, 왜 '코로나19 이후'를 상상하고자 하는지 의문에 부쳐야 한다. 결론부터 적자면, 전통적인 영토 중심, 인간 중심의 '한국 사회'란 없다. 정확히 말하자면, 국가의 통치화 효과(the effect of governmentalization of the state)를 넘어 한국 사회를 상정할 수 없다. 나아가 한국의 국가 통치화는 전 지구 통치화와 연결되어야 비로소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끊임없고 한없는 통치 실천을 통해서만 한국 사회가 지구 사회의 유기적 구성단위로 생존할 수 있고, 인간 사회도 지구 행성에서 존립할 수 있다. '코로나19 이후'라는 시기 구분은 불가하다. 유럽 중심주의가 창조한 선형적 역사 진보의 시간관은 코로나19 앞에서 붕괴된다. 앞으로 우리는, 한국 시민이건 중국 시민이건, 미국 시민이건 유럽 시민이건 간에 코로나19 그리고 그보다 더한 바이러스와도 더불어 살아야 한다. 더 이상 공간을 시간으로 대체할 수 없다. 생태계로 연결된 지구 시민의 존재 기반은 국가 단위를 넘어선다. 국경은 인간이 그어놓은 가상의 선에 불과하다. 코로나19의 맹렬한 공격 앞에 인간이 자의적으로 창출한 국제 질서는 취약하고 무기력하다. 국가별로 각자도생을 시도하고 있지만 이는 미봉책에 불과하다. 각국 정부는 자국 국경 안에서 코로나19와 맞서고자 하는 시지프스의 헛된 노력을 경주하는 셈이다.

코로나19에 대한 한국의 대응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우리는 각국 정부의 실력과 노력을 평가할 수 있게 되었다. 한국 정부는 성공적으로 대처했다. 한국은 방역 선진국이다! 한국리서치 2020년

코로나19의 맹렬한 공격 앞에 인간이 자의적으로
창출한 국제 질서는 취약하고 무기력하다.
국가별로 각자도생을 시도하고
있지만 이는 미봉책에 불과하다.

6월 5일~8일 여론 조사에서 대통령과 정부의 코로나19 대응에 대해 79%의 응답자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다른 국가들은 코로나19 사태를 맞아 선거를 포함한 기존의 정치일정을 연기하거나 취소했다. 한국은 달랐다. 세계적으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창궐한 가운데도 4월 15일 예정대로 총선을 치렀다. 코로나19에 성공적으로 대응한 문재인 정권을 향해 시민들은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에 압도적 승리라는 선물을 안겨줬다. 집권 3년 차 총선에서는 대개 여당이 고전했다. 정권심판론이 우세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번 21대 총선에서는 정반대 현상이 나타났다. 유권자들이 야당을 심판한 것이다. 물론 코로나19 사태라는 국가 위기 앞에 시민들이 대통령에게 힘을 모아줬을 수도 있다. 실제로 이번 총선에서 최대 쟁점은 코로나19였다. 이를 둘러싼 논쟁이 다른 모든 정치적 쟁점들을 압도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결국 코로나19에 대한 성공적 대처가 여당에게 300석 중 180석이라는 압도적 의석을 가져다준 셈이다.

한국 정부의 전염병 대책과 성과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게 아니다. 조류독감, 사스 그리고 메르스를 거치면서 한국 방역 당국의 지식과 제도는 꾸준히 향상되었다. 그 결과 코로나19 발생 초기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었다. 이탈리아나 미국처럼 국경 봉쇄 같은 극단적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초기 스웨덴, 영국, 일본처럼 ‘집단면역’을 기대하며 무대응으로 소극적인 대처에 머무르지도 않았다. 전자가 안전 우선의 접근이라면, 후자는 자유 중시 접근이다. 한국 정부는 시민의 안전과 자유 중 어느 한쪽에 우위를 두지 않고 균형을 지켰다. 정부와 시민이 힘을 합쳐 코로나19에 맞섰다. 국가를 통째로 폐쇄하기보다 국경을 열고 드나드는 개인들을 추적하여 검사했다. 정부와 기업 그리고 시민이 합심하여 확진자를 격리하고 치료했다. 확진자의 동선을 실시간 공개하여 시민 안전을 확보했다. 의사와 간호사 등 의료진의 헌신도 있었다. 시민 개개인이 손 씻기와 마스크 쓰기 등 개인위생을 철저히 하는 한편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 동참했다. 정부와 의료진 그리고 시민이 각자 자기 자리에서 자기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다. 코로나19 검사를 위한 진단 키트를 정부와 기업이 합심하여 신속히 개발하고 대량 생산했다. 드라이브 인, 워크 인 같은 창의적 진단 방식이 고안되었다. 마스크도 대량 생산해서 정부 지도 아래 주 5일제로 적절히 배분했다. 코로나19에 대한 정부, 기업, 시민의 연합 전선은 세계적으로 비교해 봐도 커다란 성과를 거두었다. 해외에서 날마다 치솟는 확진자 수와 사망자 수를 보며 한국인들은 상대적으로 한국이 선진국이라는 의식을 갖게 되었다. 불과 몇 년 전까지도 ‘헬조선’이라는 말이 심심찮게 떠돌았다. 지금은 다르다. 시민들은 희망을 보았다. 코로나19가 초래한 국가

위기 앞에서 시민들은 단결했다. 그리하여 한국은 국내외에서 방역 선진국으로 평가받는다. 한국은 위기가 오기 전 신속 대응, 조속한 대규모 검사, 디지털 기술 통한 접촉자 추적·격리·감시, 그리고 시민 지원 요청을 통해 전 지구적인 모범을 보여주었다. 미국이나 영국의 신자유주의적인 의료 체계도, 스웨덴을 비롯한 북유럽의 사회 민주주의적 무상 의료 체계도 코로나19 방역 문제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했다. 그렇지만 한국이 해냈다.

집단주의와 개인주의를 넘어 연대주의로

많은 한국 시민들이 코로나19 확진자와 사망자 수를 확인하는 것으로 하루 일과를 시작한다.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2020년 6월 18일 오후 현재 한국은 확진자 12,257명, 격리 해제 10,800명, 사망자 280명이다. 타국들과 비교하면 선방했다. 다른 한편으로 우리는 하루에도 몇 번씩 체온을 잰다. 학교 건물이나 공공건물에 드나들 때마다 치르는 의식(儀式)이다. 매일 이마를 짚어보며 열이 없나 초조해한다. 모두 건강염려증 환자가 되었다. 이런 공포와 우려는 현실이다. 그렇지만 코로나19 사태를 맞아서 아무런 교훈도 얻지 못하고 그냥 지나치면 허망하다. 아마도 ‘포스트 코로나’를 전망하고자 하는 심리의 저변에는 적당한 대가도 치르지 않고 적절한 반성도 하지 않으려고 하는 알뜰한 심리가 도사리고 있을지 모른다. 조속히 코로나19 사태를 종식하고 예전의 일상생활로 돌아가고 싶은 욕망은 우리의 눈을 가릴 수 있다. 팬데믹 시대를 맞아 우리는 무엇을 기대하고 무엇을 기대하면 안 되는지를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 종교적 믿음, 정치적 신념 또는 막연한 전망 대신에 과학을 중심에 두어야 한다. 코로나19 사망자를 빼면 회복자와 감염 가능자로 나뉜다. ‘집단면역’을 통해 항체가 생기거나 백신이 개발되기까지 인류는 모두 감염 가능자의 지위에 머문다. 그래서 모두 불안

코로나19 시대는 집단주의와 개인주의를 넘어
연대주의를 추구한다. 감염 가능자인 개인은
자신뿐 아니라 자신과 가까운 가족 구성원과
직장 동료 그리고 공동체 구성원
일반을 동시에 보호해야 한다.

하다. 집 나서면 어디든 안전하지 못하다. 그래서 자발적인 가택 연금 상태에 돌입한다. 여러 나라에서 중앙 정부가 강제로 가택 연금을 지시하기도 했다. 코로나19가 초래한 전염의 시대를 맞아 우리는 진짜로 “뭉치면 죽고, 흩어지면 산다”는 개인화 시대의 슬로건을 실감한다. 과거 한국전쟁기와 개발 연대에는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는 집단주의가 구호였다. 코로나19 시대는 집단주의와 개인주의를 넘어 연대주의를 촉구한다. 감염 가능자인 개인은 자신뿐 아니라 자신과 가까운 가족 구성원과 직장 동료 그리고 공동체 구성원 일반을 동시에 보호해야 한다. 전염의 시대에 개인은 스스로 하나의 방역선이기도 하다. 따라서 코로나19 시대에는 연대 의식이야말로 망망대해를 헤쳐나가는 구명선이다. 시민 각자가 전염으로부터 자유로워야 우리 모두의 공동체가 안전하다. 그러기 위해 한국 시민 각자는 스스로의 자유를 절제하고 있다. 이는 국가나 방역 당국이 강제하는 것과 다르다. 국내외 일부에서 한국 정부의 코로나19 확진자 동선 공개 정책을 두고 개인의 프라이버시 침해를 우려했다. 사실과 다르다. 개인의 신상을 공개하지 않고 익명으로 발표하고 있다. 한국 시민들은 정부의 정책에 적극 동참하며 지지하고 있다.

코로나19 감염자는 바이러스의 희생자이면서 동시에 바이러스를 실어 나르는 벡터(vector)이기도 하다. 그래서 코로나19의 바이러스로서의 성격을 과학적으로 파헤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사회적 존재로서의 인간 활동을 성찰하려는 융합적인 관점이 필요하다. 전염의 시대에 ‘우리 사회’라고 부를 수 있는 단위는 ‘인류 사회’ 뿐이다. 코로나19 팬데믹은 새로운 형태의 공동 책임을 요구한다. 그런데 공동 책임은 모든 인류가 똑같이 나눠가질 수 없다. 능력에 비례해야 한다. 왜 팬데믹이 발생했나? 지난 수세기 간 지속되고 최근 수십 년 간 가속화된 지구화 때문이다.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동안 어렵듯이 알고 있었지만 정면으로 마주하고 싶지 않았던 진실과 일시에 마주하게 되었다. 어느 나라 국민인가와 상관없이 우리는 서로 다층적이고도 복합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코로나19의 진격에 국경은 무용지물이다. 현재 벌어지고 있는 코로나19 팬데믹은 우발적 사고가 아니다. 천재지변도 아니다. 더욱이 전혀 새롭지도 않다. 과거에도 발생했고, 앞으로도 발생할 일이다.

코로나19는 한국뿐 아니라 각국의 취약한 부분을 드러냈다. 자연-동물-인간의 새로운 관계 정립이 필요하다. 바이러스 확산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바이러스의 과거를 살살이 알아야 한다. 이것은 코로나19 발생과 확산을 둘러싼 책임 소재를 가리는 일과는 다른 작업이다. 특정 국가나 특정 개인을 비난하거나 분노하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아마도 책임을 묻는다면 종(種)으로서의 인간이 개발이라는 명목으로 자연 환경에 가한 폭력이 가장 유력할 것이다. 더욱 가속화되고 있는 생태계 파괴와 기후 변화의 영향으로 인류는 전대미문의 바이러스와 더 끔찍한 팬데믹에 맞닥뜨릴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생태계 보존, 자연과의 공존을 위한 시각 전환이 필수이다. 우리가 바뀌어야 전염병도 달라진다. 종으로서의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기보다 지구 생태 파괴의 주범이다. 문명 건설을 가장한 야만적 생태계 파괴를 중단하고 생명 정치로 나아가야 한다. 주권 권력, 규율 권력과 더불어 생명 권력의 관계를 재배열해야 한다. 지구 행성은 인간만의 것이 아니다. 코로나19가 우리에게 보내는 경고는 명백하다. 지구 생태계가 깨지는 마당에 미래의 국제 질서가 미국 중심 또는 중국 중심으로 재편될 것인가를 논하는 것은 부질없다. 어느 국가이든 코로나19 국면에서 리더십을 보여주는 국가가 미래의 스마트 파워(smart power)를 주도할 것이다. 한국이 군사력이나 경제력이 아닌 도덕적 지도력을 통해 새로운 국제 규범을 선도하지 말라는 법은 없다.

한국 사회 내부의 균열과 갈등을 극복함으로써 남북 간 평화 공존을 제도화하고 한반도를 둘러싼 세력 균형을 도모할 때이다.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 관계를 넘어 생태 환경을 고려한 지구적 통치 레짐을 구상할 때이다. 지금 당면한 코로나19 팬데믹은 행성 수준의 인간-동물-미생물 관계에 대한 발본적 성찰을 촉구한다. 이 전대미문의 새로운 위기 앞에 우리 모두는 겸손해야 한다. 실사구시해야 한다. 무엇을 안다는 자만에서 벗어나 알지 못하는 것들이 훨씬 많다는 겸허함의 미덕을 되새겨야 한다. 인간의 지식 체제에 의해 체계적으로 배제된 모든 입 없는 존재들의 아우성을 마음으로 들을 줄 알아야 한다. 자연을 정복의 대상으로 삼는 개발주의에 내재된 모든 인간 중심주의를 버려야 한다. 작은 나라를 큰 나라의 속국처럼 여기는 대국주의도 집어치워야 한다. 오직 인류와 인류를 둘러싼 생태계의 자연스런 공존을 위해 협력해야 한다. 코로나19 시대, 지구적 자유와 안전의 조화를 위하여 각국은 협력해야 한다.

어느 국가이든 코로나19 국면에서 리더십을
보여주는 국가가 미래의 스마트 파워(smart power)를
주도할 것이다. 한국이 군사력이나 경제력이
아닌 도덕적 지도력을 통해 새로운
국제 규범을 선도하지 말라는 법은 없다.

코로나19 이후 필요한 것은 ‘행성적 사유’

한국은 코로나19에 성공적으로 대처했다. 그렇지만 코로나19로 초래된 불황과 실업의 공포는 나날이 증가하고 있다. 생활 방역으로 이행하면서 감염 재난으로 말미암아 침체된 경제를 수습하기 위한 노력이 시작되었다. 기업과 가게가 무너지지 않게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충분하지는 않지만 재난지원금도 지급했다. 그렇다고 이를 ‘국가의 귀환’이나 ‘케인스주의의 복권’으로 보는 시각은 단견이다. 코로나19 사태를 생태학적, 정치학적, 경제학적, 사회학적, 국제정치학적 관점으로 나누어 보려는 시도도 시대착오적이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 연구자들은 지방, 국가, 지역, 지구 차원으로 나누어 분석하는 데 익숙하다. 기후 변화나 팬데믹과 같은 행성적 차원의 문제들은 기존의 분석 수준을 넘어선다. 전 지구적인 생명 재난과 기후 변화는 인류의 존립 자체를 위협한다. 인신세(Anthropocene)에 걸맞는 행성적 사유(Planetary Thinking)가 필요하다. 코로나19 이후 사회의 전망은 우선순위로 볼 때 가장 취약한 인구 집단에 대한 배려로부터 시작해야 한다. 그와 동시에 지구 행성에 서식하는 다양한 생명체의 공존이라는 관점에서 코로나19 이후의 삶의 질서에 대한 근본적 고민이 시작되어야 한다. 지구는 다양한 생명체의 삶의 터전이다. 그중에서 어쩌면 인간이야말로 가장 파괴적이고 착취적인 종(種)일지 모른다. 인간의 탐욕을 절제하고 종간(種間)의 공존을 보장하는 것이야말로 팬데믹으로부터 인간을 보호할 수 있는 최선책이다. 바이러스도 인간의 환경 파괴로 생겨난 술한 피난민 중 하나다. 코로나19가 인류를 습격한 것이 아니다. 인류가 바이러스를 그들의 서식지로부터 내몰아 코로나19 같은 변형 바이러스를 만들어낸 것이다. 모든 문제의 근원은 결국 인간이다. 팬데믹은 일회성 사건이 아니다. 앞으로도 더욱 빈번하게, 더욱 치명적으로 발생하리라 예상하는 게 맞다.

코로나19가 초래한 현재의 위기는 지구적이면서 동시에 국가적이다. 실업자 발생, 자영업 폐업, 기업 파산 등 사회 모든 분야에서 막대한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 각국 정부는 코로나19 대응책으로 엄청난 규모의 재정을 쏟아 부어 경기부양책을 내놓고 있다. 그러면서 V자 또는 U자 경제 반등을 기대한다. 한국 정부도 긴급 구호를 넘어 다양한 경기부양정책을 모색 중이다. 이와 더불어, 그렇지만 이와는 별개로, 개별적이면서도 동시에 전체적으로 한국 사회와 지구 사회를 통치할 방안과 제도적 틀을 구축하기를 희망한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말미암아 지구인들은 명실상부한 동시대를 살고 있다. 물론 적당한 거리두기는 필수다. ‘뭉쳐

야 사는 시대' 를 넘어 '흠어져야 사는 시대' 를 지나 '적당한 거리를 두고 뭉치는 시대' 즉 불가근불가원의 시대로의 진입이다. 자국만 살기 위해 '탈지구화(de-globalization)' 나 '리쇼어링(re-shoring)' 을 선불리 말하기 힘든 까닭이다.